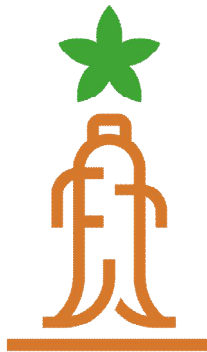


제329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



세계 인삼수도  
**금산**



**금 산 군**  
(기획예산과)

# 목 차

## 【 패소사건 】

### < 행정소송 >

- ①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061 판결문 ..... 1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민사소송 >

- ②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3893 판결문 ..... 15  
- 토지인도

행정소송



## 대 전 지 방 법 원

### 판 결

수령일	2024. 7. 19
제척기한	2024. 8. 2

사 건 2024구단20006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8 (구미동, 엠타워)

대표이사 정해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한철웅

피 고 금산군수

소송수행자 최미경, 호천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열

변 론 종 결 2024. 6. 13.

판 결 선 고 2024. 7. 18.

### 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1,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단체급식업과 위탁급식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남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에 있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금산 공장 제2식당동 1층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구내식당'이라고 한다)에서 위탁급식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3. 8. 20. 06:40경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회사 직원들에게 조식(이하 '이 사건 조식'이라고 한다)을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조식을 섭취한 직원들 중 96명이 집단적으로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이하, 위 집단 식중독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의 역학조사반(이하 '역학조사반'이라고 한다)은 2023. 8. 21. 10:50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조식에서 반찬으로 제공된 콩자반(이하 '이 사건 콩자반'이라 한다)과 식중독 증상을 보인 직원의 검체에서 동일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자,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감염원을 이 사건 콩자반으로, 원인병원체를 살모넬라균으로 각 확정하였다. 역학조사반이 작성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을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략)

IV. 역학조사결과

(중략)

7. 환경조사

가. 급식재료 유통과정(식자재 공급과정)

식자재 공급은 ○○ 위탁급식소를 통해 식자재공급을 받고 있고, 당일 조식은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270785251-C95F9

2 / 14

2 / 14



04:30에 재료를 납품 받아 당일 모두 소진하였다. 경수작업은 조리 종사자가 직접 하며, 냉동차에서 식재료가 나오면 적정 온도 및 수량 등을 기록하였다.

#### 나. 조리과정

조리종사자 손에 상처난 곳이 없으며, 위생모와 위생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조리장 환기 후드는 기름때가 보이지 않으며, 바닥 또한 조리 중 임에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도마는 야채, 고기, 생선, 가열 식품으로 색 짙별로 나누었으며, 육류 및 생선 등은 냉동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 다. 배식과정

조리된 음식은 식사 시작 30분 전 배식대에 옮겨두며, 배식은 자율배식으로 이루어 졌다.

#### 라. 기타 조리 환경

조리기구 및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없었다. 식품창고 또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냉장고를 확인한 바, 식품별 보관기준 및 온도를 잘 준수하고 있었다.

(중략)

### 9. 실험실 검사 결과

#### 가. 인체 및 환경검체 검사결과

인체 검체 34건 중 살모넬라균 12건의 병원체가 검출되었다. 검출된 인원은 전원 유증상 근로자로 확인되었다. 환경 검체 216건 중 보존식에서 살모넬라균 1건이 검출되었고, 검출된 식단은 8월 20일(일) 조식으로 제공된 콩자반으로 확인되었다.

#### 나. PFGE 염기서열 분석검사

인체 검체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 12건과 환경 검체(보존식)에서 검출된 살모넬라균 1건의 균주를 PFGE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한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 10. 추정 위험 노출시기 및 잠복기

조식섭취자 중 유증상자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고, 보존식 중 콩자반에서 인체 검체와 동일한 병원체가 확인되었다. 공동 노출원은 8월 20일(일) 07:00 이후 조식에 제공된 콩자반으로 추정하였다. 해당 사례의 최소 잠복기는 1시간이고, 최대잠복기 50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며, 평균 잠복기는 20.8시간이다.

#### V. 결론 및 고찰

##### 1. 원인 병원체: 살모넬라균(확정)

살모넬라의 임상증상은 발열, 복통, 설사 등이며 잠복기는 6시간~72시간으로 해당 사례의 임상 증상 및 잠복기에 모두 부합하여 유행의 원인 병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살모넬라균으로 확정하였다.

##### 2. 감염원: 콩자반(확정)

- 8월 20일(일) 조식 섭취 이후 유증상자가 집단 발생하여 시간적 속발성을 만족하였다.
- 콩자반의 경우 인체검체와 동일한 병원체가 검출되었으며, 해당 병원체의 임상 양상과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은 기존 지식과의 일정성을 만족하였다.
-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콩자반의 경우 식품 섭취력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나오지 않아 연관성의 강도의 통계적 유의성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인체검체와 환경검체(보존식)의 PFGE 염기서열 분석 결과 동일한 PFGE 유형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염원을 8월 20일(일) 조식으로 제공된 콩자반으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회사의 직원들에게 이 사건 조식의 반찬으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콩자반을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음식물의 폐기를 명하는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2조 및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31,800,000원을 부과하고 해당 음식물의 폐기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살균포장된 완제품인 이 사건 콩자반을 구입하여 그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다가 그 소비기간 내에 개봉하여 이 사건 조식의 반찬으로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콩자반이 원고에 의하여 보관·제공되는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식품위생법 제4조, 같은 조 제3호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식품위생법 제4조, 같은 조 제3호의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원고가 평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 확보에 노력하였던 점, 원고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식품위생법 제4조, 같은 조 제3호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본문,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군수 등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탁급식업체로서 회사 직원들에게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이 사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270785251-C95F9

5 / 14

5 / 14



진 콩자반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식품위생법 제4조, 같은 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콩자반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원인을 제공한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약 100명에 이르는 점, 피고가 사전통지에 대한 원고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4.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4조, 같은 조 제3호는 누구든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 본문,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군수 등은 제4조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재적 행정처분은 본질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제재적 행정처분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영업자가 식품을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관계 법령이 부과한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다른 영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4조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이라면, 주의의무를 위반한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으로 인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1. 일반기준 제11호는 "식품 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 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이 사건 콩자반을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조, 같은 조 제3호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인정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내지 2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23. 3. 10. 주식회사 이음푸드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조업체'라 한다)과 사이에 식자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조업체가 제조한 이 사건 콩자반을 납품받았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식자재품질보증지침에는 이 사건 제조업체는 원고에게 소비기한이 1/3이상 남은 상품(소비기한이 15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270785251-C95F9

7 / 14

7 / 14



일 이하인 경우에는 1/2 이상 남은 상품)만 납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제조업체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에게 납품한 콩자반에 대한 유통기한점검일지 (갑 제25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콩자반의 소비기한은 2023. 11. 9.까지 또는 2023. 11. 13.까지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콩자반의 소비기한을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소비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② 살모넬라균은 일반적으로 7~48℃의 온도에서 증식하고 10℃이하의 온도에서는 증식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콩자반은 '조림류 살균제품'으로 아래 사진의 영상과 같이 밀봉 포장된 완제품 상태로 이 사건 구내식당에 배송되었고, 이 사건 구내식당 냉장고에서 밀봉 포장된 상태로 약 4℃ 정도의 온도로 냉장보관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콩자반이 원고에 의하여 냉장보관되는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③ 이 사건 콩자반은 이 사건 조식제공 30분 전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포장이 개봉된 후 자율배식대에 설치된 용기에 담겨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되었다. 역학조사반이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270785251-C95F9

8 / 14

8 / 14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구내식당의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고, 식품 창고 또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식품별 보관기준 및 보관온도도 잘 준수되고 있었다. 이 사건 구내식당에서 수거한 칼, 도마, 행주 등 조리도구, 다른 보존식 등에서는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구내식당 조리종사자들은 손에 상처 난 곳이 없었고, 위생모와 위생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조리장 환기 후드는 기름때가 보이지 않으며, 바닥 또한 조리 중 임에도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평소에도 위생안전업무 일지를 작성해왔고, 사내 식품보관기준을 정하여 식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콩자반이 개봉된 후 이 사건 조식의 반찬으로 제공되는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콩자반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콩자반을 이 사건 조식의 반찬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살모넬라균은 오염된 우유, 소고기 등에서 쉽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건 콩자반은 우유, 소고기 등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되었으므로, 이 사건 콩자반이 이 사건 제조업체에서 제조되는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우유, 소고기 등에 의하여 교차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고 피고에게 '원고는 다른 업자가 제조한 완제품인 이 사건 콩자반을 단순히 납품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제공자는 제조업체이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이 사건 콩자반이 살모넬라균에 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4-0270785251-C95F9

9 / 14

9 / 14



염된 것이 제조·가공·운반·보관 등의 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이 사건 콩자반을 회사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제4조, 같은 조 제3호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라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원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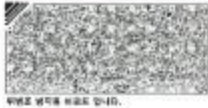
박 원 규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270785251-C95F9

10 / 14

10 / 14



[별지]

## 관계 법령

### ■ 식품위생법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제75조(허가취소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4항 또는 제1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의2, 제37조, 제43조 및 제44조를 위반하여 제75조 제1항 또는 제7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영업의 종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270785251-C95F9

11 / 14

11 / 14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8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품목·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 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업종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제89조 관련)**

**I. 일반기준**

11. 식품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가공·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조리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전문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식품 등이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품 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II.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4조를 위반한 경우 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음식물 폐기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 음식물 폐기

끝.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정본입니다.

2024. 7. 19.

대전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오호영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0270785251-C95F9

14 / 14

14 / 14

민 사 소 송

## 대 전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23가단3893 토지인도
원	고	최병배 충남 금산군 금산읍 발가운데2길 6
피	고	금산군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대표자 군수 박법인
변 론 종 결		2023. 11. 2.
판 결 선 고		2023. 1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20-2 구거 49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5, 6, 7, 8, 9, 10, 11, 12, 13, 16, 17, 18, 19, 20, 24, 25, 26, 27, 28, 29, 30, 35, 36, 3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ㄱ)부분 300㎡ 및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20-6 도로 26㎡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o)부분 26㎡ 지상의 아스팔트 포장을 각 철거하고,

나.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44-2 답 161㎡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2, 11, 9, 8, 7, 6, 3,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ㄷ)부분 117㎡ 및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44-3 답 53㎡ 중 별지2  
도면 표시 19, 25, 24, 17, 1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ㄹ)부분 53  
㎡ 지상의 아스팔트 포장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기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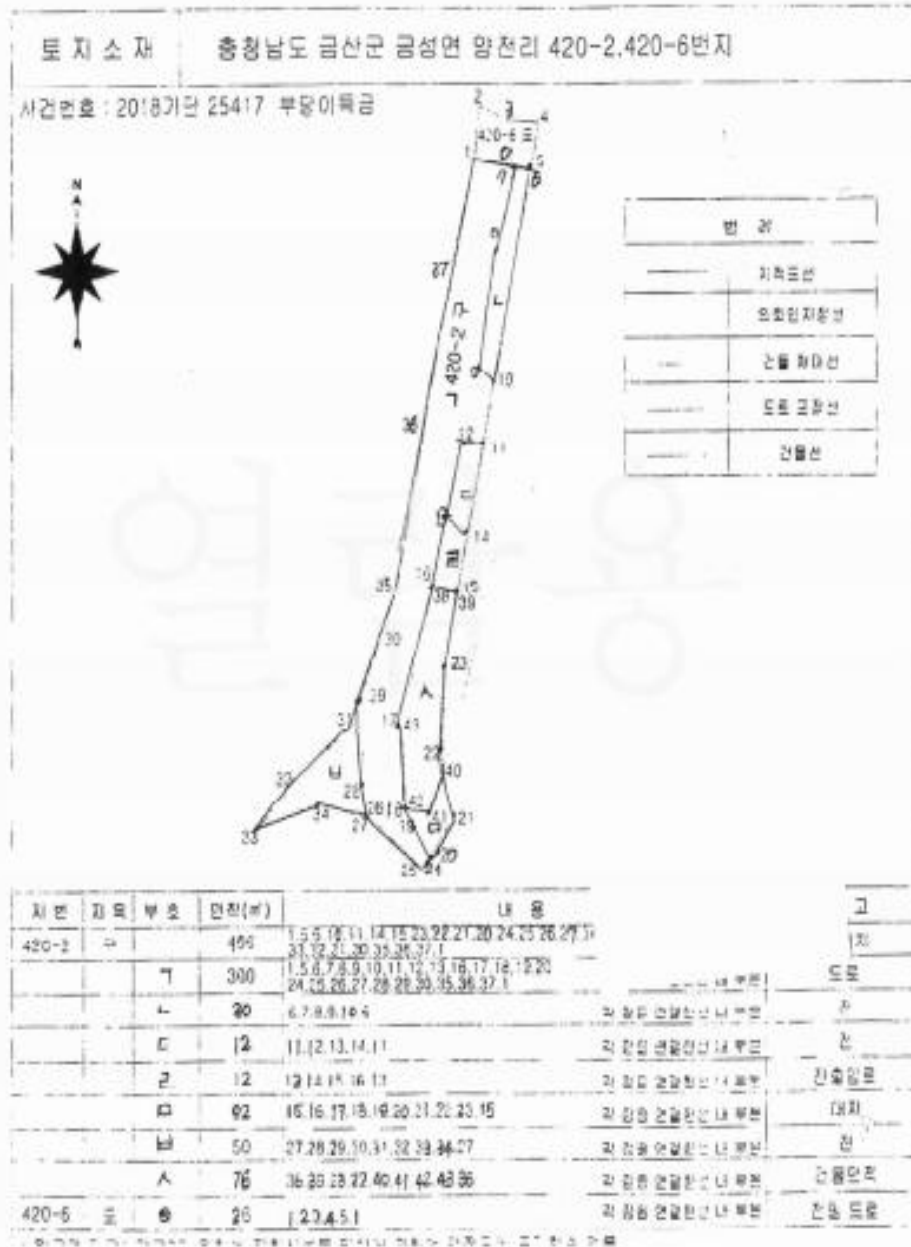
판사

성기권

성 기 권



별지 1



별지 2



## 변경된 청구원인

1. 원고는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20-2 구거 496㎡와 동리 420-6 도로 26㎡를 원고의 부친 명 최익식으로부터 상속받아 2018. 3. 29 금산등기소 제 4797호 등기를 마친 법적 소유자입니다. 또한,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44-2 답 161㎡와 동리 444-3 답 53㎡를 원고의 부친 명 최익식으로부터 각각 1/2씩 상속받은 원고의 동생 최병만 지분 전체와 최병권 지분 전체를

증여받아 (2023. 4. 6 금산등기소 제5237호) 등기를 마친 법적 소유자입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20-2 구거 496㎡ 중 300㎡와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20-6 도로 26㎡에, 토지인도 및 부담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가단 25417 선고 2021. 4. 7(갑 제1호증 1심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 나 108597 항소심 2022 6. 14 선고에서 (간 제1호증 항소심판결문) 토지인도와 함께 부담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산군에서 아스팔트 포장의 철거를 약속하고도 이행지 않아 토지이용을 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토지인도를 위하여 강제적인 철거가 필요합니다.

3.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44-2, 444-3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는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44-2 답 161㎡ 중 117㎡와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444-3 답 53㎡ 중 53㎡ 전체 토지를 소유자 동의 없이 아스팔트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속과 증여등기 이전부터 실질적인 관리와 소유권자인 원고가 2017년경부터 피고 금산군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양전리 444-2, 444-3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도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한 폭을 가진 도로가 있음에도 소유자 동의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불법전용은 다음과 같은 불법의혹이 있습니다.

① 서쪽 마을회관 경계와 동쪽 주택경계 사이 폭은 원고 소유 토지 (양전리 444-2, 444-3) 포함하여 지적 상 1.350cm ~ 1.450cm로 측정되며 현황상으로는 약 900cm ~ 950cm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지적상의 차이는 마을회관 점유폭과 열 창고건물 점유폭 100cm 내외를 제외하더라도 (국토정보공사 감정도상) 350cm ~ 400cm 불합치가 납니다.

② 국토정보공사 금산지사의 측량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300cm ~ 400cm의 불합치는 동쪽 주택들의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755-12 마을도로를 점용한 것입니다.

㉔ 그렇다면 금산군은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755-12 마을도로를 동쪽 주택의 주인이 도로정용을 한 뒤, 상대적으로 좁아진 마을도로의 폭을 원고 소유 양전리 444-2, 444-3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한 뒤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결론

따고는 위의 같은 불법을 바로잡아 동쪽 주택 주인이 점용한 부분을 도로로 환수하고 원고 소유 농지의 아스팔트 포장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원합니다.